

# '97년 통상환경 전망

국제부, 통상과

## 목 차

### I. 미국의 통상 환경

1. 지역 및 다자간 무역관계
  - 1) WTO
  - 2) 신속승인 절차권
  - 3) NAFTA
  - 4) FTAA
  - 5) APEC
2. 쌍무 무역
  - 1) 한국과의 관계
  - 2) 중국과의 관계
  - 3) 일본과의 관계
3. 통상관련 규정
  - 1) 반덤핑규정
  - 2) 우회방지규정
  - 3) TCC
4. 집권 2기 내각 구성

### II. EU의 통상 환경

1. 신규 반덤핑조사
  - 1) 팩스기기
  - 2) CTV
  - 3) V/TAPE
  - 4) 기타
2. 시장접근 정책
3. 세번분류
4. 상호인정협정
5. GSP

### II. WTO

1. ITA
2. 우회덤핑규정 제정
3. 기타

## I. 미국의 통상환경

- GDP 증가율이 2.2%로 성장세 지속
- 수출확대와 제3국 시장 개방에 역점
- 반덤핑조치나 일방적 규제(수퍼 301조 등)보다는 다자간협정이나 쌍무협상에 주력
- 역내 교역확대와 영향력 증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A) 적극 추진

'97년 미국경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 호조와 수출증가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지출 둔화와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지출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아 '96년 2.3%보다 다소 둔화된 2.2%의 GDP 증가율이 예상되나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달러화 강세기조 완화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통상정책의 기초는 반덤핑과 같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보다는 수출확대와 교역상대국 시장개방을 우선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1기의 경험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규제나 내수시장 보호보다는 수출증대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에 대하여 한층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다.

따라서 쌍무 및 다자협정의 철저한 이해 압력과 정보, 통신, 의약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의 관세 인하, 대형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공정경쟁, 기술혁신 주도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WTO, OECD, APEC 등 다자협의체나 지역별, 분야별로 쌍무협상을 통한 통상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지역 및 다자간 무역관계

미국의 무역정책은 향후 4년간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지역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여러가지 WTO 무역분쟁해결 절차를 주의 깊게 평가하는 한편, NAFTA와 Mercosur의 성공이후 궁극적으로 서반구 블록경제(FTAA)의 창설을 구상중이다.

#### 1) WTO

클린턴 제2기 행정부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역점을 두고 WTO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케이스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한 바 있는 미국은 다자간 무역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시험해 보는 한편 일방적 조치를 지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일본의 음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컨설팅이선과 패널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 2) 신속승인절차권(Fast Track)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것은 신속승인 절차권한의 연장이다.

칠레의 NAFTA 가입이나 FTAA 협정과 같은 무역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승인절차 권한이 필수적이나 작년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신속승인절차권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더욱이 올해에도 의회에서 Fast Track협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연장 가능성이 올봄 이후에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NAFTA

클린턴 대통령은 NAFTA를 서반구 통합(특히 미주대륙)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무역협정과 대외공약에 매우 비판적인 공화당의 승리로 클린턴 행정부는 통상문제 특히 칠레의 NAFTA 가입문제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1996년 대선중에도 클린턴은 노조와 보호주의자들을 의식해 NAFTA와 같은 통상문제를 자제했었다.

미국은 그러나 미주국가들과의 역내무역에 역점을 두기 위해 칠레의 NAFTA가입을 추진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신속승인절차권이 필수적이다.

#### 4)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클린턴 제2기 행정부는 FTAA

의 창설 공약 이행에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미주 34개국 통상장관들은 향후 2000년까지 FTAA 창설을 위한 협상을 개시키로 선언한바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서반구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NAFTA와 Mercosur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 여름 남미지역을 순방할 예정이다.

비록 신속승인 절차권한이 연장되지 않아 미국의 FTAA 추진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행정부는 다시 한번 FTAA 추진을 시도할 것이다.

#### 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포럼은 시장접근 개선과 ITA 지지에 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PEC의 ITA지지는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시 ITA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번 APEC 포럼은 개별산업분야의 관심을 보다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별 자문기구들은 기업인 비자 면제등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냈었다.

APEC은 합의체 성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므로 규정에 근거한 접근보다는 공동목적에 근거해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 2. 쌍무무역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은 일방적 조치를 지양하고 시장개방(특히 아시아)과 미국 수출 증가에 역점을 둘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양국간 무역분쟁 발생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Super 301조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이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 조치를 지양하고 무역협정에 의지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1) 한국과의 관계

미국은 지난 해 한국의 통신시장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장벽을 이유로 Special 301조하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개시했으나 타결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한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의 결과로 설립된 Global Governmental Forum에 참여함으로써 여타 반도체 생산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열린 Global Governmental Forum에서 한국과 EU에게 반도체 덤핑방지를 촉구했었다.

### 2) 중국과의 관계

제2기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 혹은 영국적인 최혜국 대우 지위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비록 영구적인 최혜국 대우가 중국의 WTO 가

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적으며 이에 대한 대안회의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지지에 앞서 중국이 충족해야 할 여러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15%의 관세인하를 제시하였다. 클린턴과 중국 장쩌민은 향후 2년간 2번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반도체 협정을 1999년까지 연장하였다. 이 새로운 협정은 민간부문의 Semiconductor Council과 정부부문의 Global Governmental Forum 등 2개의 협의체를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동향분석을 위해 년 1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첫번째 회합은 '96. 12 셋째주 동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미국, 일본, EU, 한국은 ITA의 기술적 사안들을 조속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 4) 일반특혜관세(GSP)

클린턴 행정부는 '96년 GSP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이를 1997. 5. 31까지 연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노동권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1997. 1. 1부로 GSP프로그램에서 졸업하였다.

### 3. 통상관련 규정

#### 1) 반덤핑 규정

미국 상무부는 '97년초 반덤핑 UR협정 이행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동 최종안은 상무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아울러 반덤핑 문제에 관한 상무부의 재량권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우회방지 규정

상무부는 UR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인 한국산 CTV에 대한 우회방지 조사의 잠정판정 결과를 1997년 3월 경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Trade Compliance Center

상무부는 TCC를 설립하여 USTR과 함께 외국의 시장개방 약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TCC는 각 기업 및 노동자단체들과 함께 무역관련 문제들을 조사하는 한편 WTO 제소 등 미국의 해외 수출을 보호하고 증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TCC의 활동은 결국 상무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더욱 유발시키게 될 것인데 그 첫 과제는 외국의 지적재산권과 투자장벽에 대한 UR이행안 준수여부조사 등이 될 것이다.

#### 4. 집권 2기 내각 통상관련 주요인사

상무부 장관 - William Daley

시카고 사업가이자 전은행가로서 1993년 크린턴 행정부의 NAFTA 국회통과 추진에 가장 앞장 섰으며, 무역장벽완화와 수출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다.

• USTR 대표 - Charlene Barshefsky

1996. 4 이후 USTR의 대표로 전임자인 Mickey Kanter와는 달리 직업이 통상 변호사로서, 통상 문제에 대한 식견은 널리 정평이 나있다.

Mickey Kanter에 비해 국내의 정치지향적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UN 대사 - Bill Richardson

New Mexico의 7선 국회의원이며, 북한·이라크·방글라데시·수단 내 미국인 포로석방 협상 등 밀사 역할 수행

• 미국경제이사회 의장(National Economic Council) - Gene Sperling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대통령에게 제출된 경제정책에 대해 최종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국제경제 정책 보좌관 - Daniel Tarullo

• 국제경제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며 노동권을 중요시 한다.

• 국 무 장 관 - Madeleine Albright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으로 클린턴 제1기 외교정책팀에서 UN대

사를 역임하였으며 대외정책수립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강경한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 II. 유럽의 통상 환경

• GDP 증가율이 2.3%로 '95하반기 이후의 점차적 경기회복 지속

• 중동부유럽의 역내경제권 흡수 및 아시아, 남미 등과의 협력 확대로 대외적 영향력 증대에 주력

• 반덤핑규제와 제3국 시장개방 정책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확보를 위한 WTO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예상

• 한국의 전기면도기 반덤핑규제로 보복적 성격의 대한 무역규제 가능성 우려

유럽의 경제는 1995년 하반기 이후 점차적인 경기회복이 1997년에도 이어져 2.3% 정도의 GDP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1999. 1월로 예정된 제3단계 EMU(유럽단일통화동맹) 출범과 관련 각국은 EMU 참여자격 요건 충족과 관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긴축재정 및 세금 인상 요인을 갖고 있다.

1992년 EC 출범 당시 우려했던 EC 역내 요소화의 우려는 WTO 출범 이후 EU가 보여온 각종 대내·외 경제정책에서 실증되고 있다.

유럽 안보와 경제에 아킬레스건

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 발트 3국, 터키 등 약 14개국)들을 자유무역 협정 또는 관세동맹 등을 통해 서부유럽경제권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의 ASEM 설립 그리고 중남미 4개국 경제협의체인 "MERCOSUR"와의 협력 협정을 통한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중인 제3국의 시장장벽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쌍무협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이미 기존의 역내시장 보호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담당 인원을 2배로 증원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한 바 있으며, 1997년부터는 수출시장 개선을 위해 제3국 시장장벽 조사 이외에도 통신협상, 정보기술 협정(ITA) 등 비교우위 부문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재 WTO 이행법안의 제·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전개되는 투자, 노동, 환경 등 신규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세적 대외무역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신규 반덤핑 조사

### 1) 팩스기기

상반기중 조사가 개시되어 1997년중 잠정판정으로 인한 규제가 예상된다.

조사개시시 한국산 물량('95년도 EU역외수입시장 점유율 - 25.4%) 및 수출가격(일본제품의 37% 수준: EUROSTAT 실적기준)을 감안하여 볼 때 덤핑이나 산업피해 측면에서 무혐의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2) CTV

상반기중 재심 조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아측은 현재 산업무피해와 EU내 투자증대를 사유로 조사종류를 요청중에 있으나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이 가입되어 있고 CTV를 전략적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는 EU로서는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 V/Tape

재심조사를 2년 이상 끌어 오고 있다.

1996년 12월 아측의 조사결과 발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잠정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합"이 "BASF"사의 자기테이프 사업부문 인수를 마무리지은 상태인바 고합의 제소철회 의지 여하에 따라 본건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기타

- DRAM 재심결과가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며

- EU산업은 한국산 MWO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흡수(Anti-absorption) 조사를 위한 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흡수란 수출자가 덤핑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아국은 지난 '92년 CDP 수출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컴퓨터 모니터와 위성방송 수신기에 대한 제소설이 있었으나 진위파악이 불가하다.

## 2. 시장접근 정책

EU는 '96년 2월 "EU의 시장 접근 전략"정책서를 채택하고 집행위 DGI산하에 시장접근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제3국의 무역관행이나 장벽, 관세, 서비스 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96년 11월 현재 40여개국 정보 축적)하였다.

EU는 이를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정보축적을 지원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 제3국 시장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쌍무 및 다자협상에서 활용할 경우 상당한 협상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과 관련한 것으로는 통신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한 WTO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였는데 지난해 결국 양국간 통신 시장개방 합의로 종료되었다.

1997년부터는 그동안의 축적정보를 이용, 본격적인 제3국 시장개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다 많은 케이스가 WTO 분쟁해결위로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 3. 세번분류

EU는 그동안 CD-ROM 드라이브와 PCTV(PC+TV) 그리고 LAN카드 등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세번분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CD-ROM드라이브를 비디오기기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올린 EU의 결정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를 WCO 세번분류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국 승소한 바 있으며 결과로 지난해말 EU는 관보를 통해 이를 공식 정했다.

가전과 정보통신의 복합 또는 신제품에 대한 이와 같은 EU의 세번분류는 대부분 관세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의도는 지난 '96. 12. 13 싱가포르 WTO 각료 회담에서 체결된 ITA 협정과도 무관치 않은데, 협상 당시 가전제품 포함을 주장한 미국에 반대했던 EU는 경쟁열위 품목 또는 역내산업의 요청에 따라 이들 멀티미디어 제품들을 가전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로 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MRA(상호인정협정)

세계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과 환경문제가 새로운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각자의 제품 안전이나 환경규격들을 갖고 있는데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1996년 EC집행위 대외무역담당인 레언브리튼과 뱅거만 집행위원은 무역과 표준화에 관한 EU 정책서를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은 WTO TBT(무역기술장벽) 협정이행과 MRA 완결이다.

EU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등과 MRA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향후 EU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필리핀, 중국, 남아공,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과도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1996년부터 전자기파에 대해 EU가 강제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CE마크제도는 저전압기기, 통신기기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나 아직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관세나 수량제한 같은 무역장벽들의 점진적 감소로 무역기술 장벽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 5. GSP

1995년부터 시행된 EU의 3차 GSP 운용안에 따라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대한 특혜가 1996. 1. 1 이후 중단 되었으며 또한 1993년 세계은행 자료기준에 따라 선발개도국에 포함된 한국은 1998. 1부터 EU의 GSP 수혜대상국가로부터 졸업할 하게 될 것이다.

과거 특혜를 받았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쿼터나 특혜율 제한 등으로 제재를 받아 왔던바 '96년 이후의 특혜중단에 의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 해외투자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아국 전자 산업으로서는 여전히 EU의 GSP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III. WTO

- 출범 3년째를 맞아 다자간 협상의 중심체로서의 위상 확립
- 환경, 투자, 경쟁, 노동 등의 신규 협의 증가와 TBT, TRIPS협정 이행수준 검토 등 본격적인 다자협의 개시
- 미·EU 등 선진국의 참여도 증가와 이로 인한 분쟁 해결절차 사용 증가

### 1. ITA(정보기술협정)

1996년 12월 13일 싱가포르 WTO 각료회담에서 공동 선언문 채택함에 따라 참가국들은 정보기술분야의 제품에 대해 1997년 3월

1일까지 자국의 양허안을 제출하고 이를 4월 1일 까지 참여국들 간 검토한후 1997년 7년 1일부터 오는 1999년 12월 3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 하였다.

협정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24개국으로서 전세계 정보기술부문 생산의 약9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ITA가 시행되면 WTO 회원국으로서 비참가국가들도 MFN 원칙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선언문 참가국들은 이를 위해 협정발효 이전까지 참가국 수준을 전세계 교역의 90% 이상 끌어 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팩스, 전화기 등 정보기술 부문의 단말기 기부터 반도체, 저항기 등 부품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어 관세인하시 교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구미 각국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당시 말레이시아를 위시한

개도국들은 관세철폐일정에 반대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최소 8년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하기도 했다.

## 2. 우회덤핑 규정 제정

WTO 반덤핑위원회가 준비중인 우회방지규정은 수입규제와 관련된 해외투자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1996년 상반기까지 협상 진행 절차에 대한 협의가 있어 오다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담 준비 관계로 소원했었으나 1997년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현재 유일하게 EU가 반덤핑 이행법에 우회방지 규정을 삽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데 규제 대상국산 부품을 60% 이하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 등 많은 품목들이 해외투자되어 있는 국가들은 EU의 60% 기준에 반대하고 UR 타결 당시 둔켈 중재안이었던 70%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 한국과 같은 수출의존도가 큰 나라들과 미국, EU와 같이 큰 수입시장을 가지고 방어적인 무역정

책을 펴는 나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동협상은 협상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금년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3. 기타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과 관련 1997년 2월 전자부문에 대해 각국이 제안한 원산지 제안서가 검토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아국 전자산업의 입장은 '96년 12월 정부측에 전달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세번변경 기준을 제시했으나 통상 2개국 이상이 생산에 참여하는 전자 제품의 경우 원산지결정 보조기준으로서 부가가치 기준이 간과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는 세번변경 기준에 부가가치 기준을 보강한 제안서를 기제출했다.

TBT(무역기술장벽협정) 과 TRIPS협정(지소권협정)이 1997년중 검토작업이 개시 될 것이며 WTO 무역환경위는 지난 2년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한 추가논의가 예상된다.